

---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담당기자

발 신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박성용 운영위원장

문 의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 T. 010-4944-6347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 T. 02-774-455

시행일 : 2015. 3. 12.(목)

제 목 : <성명> 홈플러스 혁신안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총 2매)

---

# 홈플러스, 시급한 것은 연중 할인서비스가 아닌 개인정보 유출 피해 통지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어떠한 대책 없이

혁신 운영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비자 기만행위 –

– 시민단체가 신청한 개인정보 열람 신청 지체 없이 처리해야 –

1. 지난 10일 홈플러스(주)는 기자 간담회를 열어 주요 신선식품을 연중 항상 10~30% 싸게 판매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된 ‘4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2,406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2.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표이사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도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시간이 지나 사법 판단이 내려지면 저희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3. 그러면서 “고객과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행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신선식품 강화를 골자로 하는 ‘4대 혁신안’을 내놓은 것이다.
4. 이러한 홈플러스(주)의 행태는 자신들의 잘못을 할인행사 등으로 쓸리게 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전형적인 소비자 기만행위이다.

5.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넷은 홈플러스가 할인 운운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통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선적으로 시민단체가 요구한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지체 없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는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6. 홈플러스는 할인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소비자들이 불법으로 제공된 개인정보로 인해 스팸성 보험가입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7.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넷은 홈플러스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인단 모집은 3월 31일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진보네트워크센터